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기본 과제	가족 친화적 관점에서 본 주택 규모 기준의 적정성 연구	조상규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아파트 녹지의 가치 추정 및 설계 관리 개선 방안 연구	김용국
	Active Living 실현을 위한 건축·도시공간 통합안전 정책 도입방향 연구	고영호
	지역활성화 정책의 공간환경 질 향상을 위한 디자인관리체계 도입과 개선방향	서수정
	노후 정부청사의 효율적 유지 및 자산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김영현
	국가유산 일대 공공건축 조성 사업의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박태홍
	고령자 돌봄수요 대응형 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방재성
	인구감소지역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 및 운영방안	장민영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축물 데이터 품질 고도화 방향 연구	안의순
	농촌소멸 대응 빈집 관리체계 마련 연구	한수경

auri

기본과제

❶ 가족 친화적 관점에서 본 주택 규모 기준의 적정성 연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주택 가격 상승과 주거 불안정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높은 주거 비용과 제한적인 주택 공급은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자녀 가구는 더 넓은 주거 공간이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주택 시장은 이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주택 규모 기준이 시대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주택 규모 기준(전용면적 85m^2 이하)은 1973년 도입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며 공공 및 민간 주택 공급의 기준이 되어왔지만, 주거 환경의 다양성과 다자녀 가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민주택 규모 기준은 세대당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을 공공 및 민간 공급의 표준으로 삼고 있으며, 각종 세제 및 금융 지원과도 연계되어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여전히 2자녀 가구까지를 고려한 3LDK(거실+방 3개) 형식에 머물러 있어, 3자녀 이상 가구의 주거 환경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다자녀 가구는 주거 공간이 협소하여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하거나, 충분한 생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 비용 부담이 과중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민주택 규모 기준이 시대 변화와 가구 구성원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가족 친화적 관점에서 현행 주택 규모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자녀 가구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주택 규모와 현재 공급되는 주택의 시장 가용성을 비교·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현실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주택 규모 기준의 개정 또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례 도입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주거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조상규

❷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아파트 녹지의 가치 추정 및 설계·관리 개선 방안 연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흡수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도시 정주지 내 녹지공간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는 도시 내 주요 주거공간으로서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조성된 녹지는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 정주지 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최초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정주지 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안)'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정주지 내 3,783ha의 탄소흡수 공간을 확충하여 약 4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정책은 공원녹지, 개발제한구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아파트 단지 내 녹지는 별도로 고려되지 않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아파트 녹지를 정주지 탄소흡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지리정보 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반 분석을 통해 국내 아파트 단지의 녹지 면적과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탄소흡수량을 정량적으로 추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여 아파트 녹지의 계획, 설계, 관리 기준을 비교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및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 연구를 통해 아파트 녹지의 탄소흡수 기능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주지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국

❸ Active Living 실현을 위한 건축·도시공간 통합안전 정책 도입방향 연구

성장사회에 조성된 우리나라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경제·사회의 성장 효율성을 목표로 결과물 중심의 건축도시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성숙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안전한 건축도시공간의 조성은 낙상, 화재, 침수, 범죄, 보행·교통 등 개별적 안전강화 정책과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상황에서 정책의 연계성 미흡과 공간적 위계와 특성을 고려 부족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범죄예방·안전을 위해 설치한 방범창이 침수안전 대책과 충돌하고, 침수 안전을 위해 조성한 필로티 구조의 건물은 화재 안전 대책과 충돌하는 등 국민이 이용하는 주요 공간환경은 개별적 안전 강화 정책이 상충하며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방향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이 연구는 범죄, 화재, 보행·교통, 낙상, 침수의 생활안전 정책이 공간환경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상호 연계·통합 또는 상호 충돌·중복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단한다. 공간환경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접근·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여, 도시와 건축물 단위에서 실질적인 생활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간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Normartive Matrix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개별적인 안전강화 정책과 관련된 법령을 공간 유형별, 생활안전 유형별로 검토한다. 수도권 대도시와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읍면동 수준 사례지를 설정하고 주거단지와 보행로, 공원·복지관 등 생활복지 공간과 시설에 대한 안전정책과 사업의 정합성을 점검한다.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와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통합적 생활안전 강화 방안을 도출한다.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 생활안전 강화계획 수립 매뉴얼과 디자인 가이드를 제안하고, 국가의 생활안전 강화 정책 정합성 개선 및 지자체의 관련 사업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공간환경 단위의 통합적 생활안전 제고와 다층적·종합적 안전 이슈 대응

능력 강화의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영호

❹ 지역활성화 정책의 공간환경 질 향상을 위한 디자인관리체계 도입과 개선방향

공간환경 디자인 관리체계는 2009년 「건축기본법」 제21조 '건축디자인기준'을 근거로 도입되었다. 디자인 관리체계는 디자인거버넌스(디자인정책, 디자인프로세스, 디자인조직, 디자인평가)와 거버넌스의 결과가 반영된 공간환경마스터플랜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그간의 행정주도의 공간환경 조성 프로세스를 전문가 주도의 프로세스로 전환하고 공간환경의 질 향상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9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공간환경 디자인 관리체계를 지자체에 적용하기 위해 국비지원사업인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을 시작했고 민간전문가 제도로 정착시켰다. 이후 '해안마을경관형성 시범사업',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취약지역개조사업', '지역개발사업', '어촌어항재생사업' 등 다양한 국비 지원 사업에도 디자인 관리체계가 적용되었다. 특히 건축공간연구원에서 기획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한 국비 지원 사업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공간환경 디자인 관리체계를 변용하여 적용하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공간환경 디자인 관리체계는 물리적, 사회·경제적 측면의 통합적 공간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했으나 물리적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 집중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촉매 역할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농림부, 문화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국가유산청 등 공간환경을 기반으로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여러 부처에서 디자인관리체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간환경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은 인구감소, 저성장, 양극화(생활서비스 향유도의 지역적 양극화, 양질의 일자리 기회제공 등), 산업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지고 복잡해졌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활성화 정책사업에 적용했던 디자인 관리체계 적용 성과를 진단하고 한계를 분석하여 정부 정책사업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단순히 물리적 환경이 강조된 장소의 질 향상에서 나아가 공간의 기능과 운영 프로그램, 사용방식, 사용 주체 등을 반영한 공간구조 재편 방안을 고려한 지역 활성화 측면의 디자인관리체계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수정

❺ 노후 정부청사의 효율적 유지 및 자산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공공건축물은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국가 자산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최근 신축 공공건축물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청사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청사의 경우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공간적 요구가 존재하며,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는 단순한 건물 보존 차원을 넘어 국민 편의 증진, 안전 확보,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현재 정부청사의 유지보수 체계는 단기적 대응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처별 개별 청사 중심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져 국가 차원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반시설관리법」이 도로,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반면, 정부청사는 해당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정책이 미흡하다. 이로 인해 정부청사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 부처별 예산 집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장기적인 시설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정부청사의 유지 및 자산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청사의 생애주기

별 관리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정부청사의 유지·관리 및 자산관리 체계를 비교·검토한다. 또한 정부청사의 유지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정부청사의 유지·관리 개념과 현황을 고찰하고, 생애주기별 유지관리 정책 및 예산 운영 체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국내외 노후 정부청사의 유지관리 및 자산관리 사례를 검토하여 벤치마킹이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정부청사의 유지 및 자산관리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법·제도적 정비를 통한 실행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청사의 장수명화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공공자산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김영현

❻ 국가유산 일대 공공건축 조성 사업의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정책은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관련 법령과 제도가 정비되었으며, 국가유산청이 출범함에 따라 국가유산의 향유와 활용, 산업진흥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기조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국가유산의 보수·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활용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국보·보물·사적 등의 보수·정비 건수는 2019년 대비 42% 증가했으며, 예산 투입도 30% 이상 확대되었다. 아울러 도시공간 차원의 국가유산 정비를 위한 법령과 법정계획이 활발히 제정·수립되는 추세로, 국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유적 활용 사업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가유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향유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유산 일대의 공공건축은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자원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유산의 향유·활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의 품격과 품질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유산 일대 공공건축에 대한 디자인 관리체계의 개선과 개발은 더딘 상황이다. 현행 국가유산수리 제도 내에서 공공건축의 조성은 '정비' 행위의 일부로 국한되어 있으며, 건축디자인 관리 기준은 규범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띠어 실효성이 낮다. 건축물 조성 과정에서는 잦은 설계변경과 사업변경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격입찰 중심의 설계자 선정 방식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가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건축디자인 관리 원칙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의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유산 일대 공공건축의 주요 사례를 검토하여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건축디자인 관리체계의 구축 방향을 제시, 국가유산과 조화를 이루는 공공건축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태홍

❼ 고령자 돌봄수요 대응형 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고령인구의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복지 재정의 효율화 관점에서 건축 및 주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택에서 요양시설, 요양병원으로의 입원·입소 저감을 통한 의료비 저감을 위해서는 고령자에게 특화된 주택 공급과 주택개조, 노인주거복지시설 확충 등 다각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즉, 건강상태별로 적정한 돌봄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다양한 주택 유형과 주거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고령친화도시 제도 도입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통합돌봄을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외에도 노인복지 및 주거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의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돌봄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노인주거지원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책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노인복지 및 주거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자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정책적,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과 연계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활성화 및 질적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방재성

❽ 인구감소지역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 및 운영방안

국가 총인구 감소와 빠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저하, 주거·생활 인프라 축소 등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인구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통근·통학, 휴양, 업무 등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무르며 경제·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생활인구' 개념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생활 인구를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또한, 워케이션(Workation), 로컬 체험, 귀농·귀촌 준비 등을 통해 체류형 생활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단순한 체류 지원을 넘어, 이들이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입법적 설계와 전략적 공간 조성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의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와 정착을 지원하는 거점 공간이자 지원 플랫폼으로서 '생활거점'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생활 인구는 유연한 거주방식을 기반으로 하며, 기존 정주인구와는 다른 생활·공간적 수요를 가진다. 따라서,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원격근무, 창업,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촉진해 정착을 유도하는 '생활거점'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체류형 생활인구의 특성과 수요를 분석하고, 국내외 생활거점 사례를 검토하여 지역 맞춤형 생활거점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분석하고, 활용 가능한 지역자원과 생활인구 유형별 수요를 고려하여 생활거점 조성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근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 스테이 공간을 제공하거나, 1인 가구 증가, 워케이션 및 재택근무 확산 등의 영향으로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등 단기 거주를 위한 임대 플랫폼 운영 등 민간 주도의 활동도 다양해지고 있다.

연구를 통해 생활거점이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민영

❾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축물 데이터 품질 고도화 방향 연구

건축물대장으로 대표되는 건축행정 데이터는 건축물의 현황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장부로서 건축물과 관련한 범정부 데이터 연계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데이터이다. 그러나 현재 건축행정 데이터의 오류, 누락, 불일치 등 품질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건축행정은 건축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행정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품질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상이하며, 일관된 품질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 건축물별로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나, 막대한 노력과 자원이 소모될 것이다.

건축물 데이터의 연계와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건축물 데이터의 개방과 연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건축물 데이터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계, 기계학습, LLM 등 최신 인공지능 방법론을 활용하여 건축물 데이터의 오류, 누락, 불일치 등 품질 문제를 찾고, 최종적으로는 허가권자의 현장조사 및 현황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 데이터의 연계, 품질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축물 관련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위해서는 개방 데이터의 품질 고도화가 중요하며, 현재 데이터에 존재하는 이상값과 결측값을 적절하게 대체하여 더 정확한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축물 데이터의 품질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건축물 데이터 품질 고도화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 데이터에 인공지능 방법론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이를 적용한 품질 고도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안의순

⑩ 농촌소멸 대응 빈집 관리체계 마련 연구

우리나라 농촌은 인구 급감에 따른 소멸 위기 속에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당면해 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읍·면 지역의 빈집은 지난 8년 간 약 32.7% 증가하였으며(2015년 414,890호 → 2023년 550,638호), 2023년 현재 빈집이 전체 주택 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읍 11.4%, 면 14.5%)로 동 지역(6.4%)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는 농촌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고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2023년 4월) 및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2024년 3월)을 발표하는 등 빈집의 감축과 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지원 가능한 예산은 한정적이고 빈집 발생이 수요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모든 빈집을 철거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빈집 정책의 대상과 범위 설정이 공간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효과적일지에 대한 기준과 빈집 유형별 적용 가능한 관리 전략이 미흡하여, 비효율적 예산 투입 및 정책 효과 감소가 우려된다.

공동화·과소화가 가속화되면서 소멸 문제에 직면해 있는 농촌에서 빈집은 지역 내 다양한 문제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빈집 등급에 기초한 재생 전략보다는 빈집의 발생 특성과 지역 환경, 공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다면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 빈집에 대한 다면적 진단이 가능한 '빈집 평가 지수(Vacant House Evaluation Index: VHEI)'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적 투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빈집 대상의 선별과 빈집 재고의 효과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농촌 빈집 관리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한수경

건축공간연구원-킨키대학교 국제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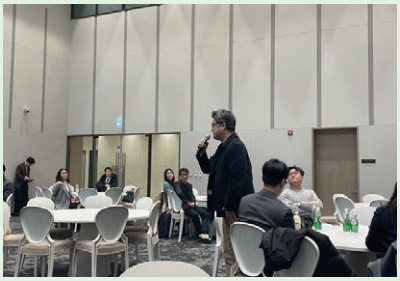
건축공간연구원과 일본 킨키대학교는 1월 13일(월)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공간복지'를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복지'를 주제로 사례를 공유하고 시사점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먼저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청년세대 주거수요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이어 방재성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한국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역사회 지속거주(AIP)인식과 주거지원 방향'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야마구치 켄타로 킨키대학교 교수가 '지속 가능한 노인돌봄 시설 계획(Planning Sustainable Elderly Care Facilities)'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세키가와 하나 킨키대학교 교수가 '오사카 도시 보육원에서의 야외 활동을 위한 공간 활용 : 지역 사회 단체의 관리 하에 있는 개방 공간에 초점을 맞추어(Space Usage for Outdoor Activities in Urban Nursery Schools of Osaka : Focusing on open spaces under community associations' control)'라는 주제로 설명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부원장이 사회를 맡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복지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5 공공건축 제1차 세미나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2월 25일(화) 원베일리 인바이트 지역문화센터에서 '2025 공공건축 1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외 공공건축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 건축물 관리 도입 방향을 모색하고 25년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장경순 건축공간연구원 전문위원이 'GSA PBS의 기능과 역할 Learning from "Facilities Standards for the PBS" '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두 번째 주제발표는 이주경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센터장이 '2025년 공공건축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지영 경남공공건축지원센터 센터장이 '공공건축제도 사용설명서' 발표에 이어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행정부분 수상 사례를 소개하며 발표를 마쳤다.

이어진 자유토론에는 전원이 참여하여 국가센터와 지역센터의 협력 강화, 데이터 기반 정책 효과 분석 및 체계 구축, 공공건축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기능 강화 등 공공건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2024 교육훈련 결과 발표회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2월 28일(금)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5 제1차 AURI 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2024 교육훈련 결과 발표'를 주제로, 2024년 직원교육훈련 종료에 따른 국내외 연구 연수 대상자의 교육훈련 결과 발표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AI 기반의 초고령사회 보행환경 평가체계 연구'를 주제로 2025년 초고령사회로 전환된 우리나라의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고령친화형 보행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두 번째 발제는 이규철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건축양식으로 '한옥' 용어의 범주 연구'를 주제로 한옥 정책에서의 한옥 정의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여경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형태기반규제(Form-based Codes) 관련 법제도 및 방법론 연구'를 주제로 형태기반규제(Form-based Codes)의 개발 목적과 주요 구성 요소 등을 설명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주제를 통해 건축 및 공간 관련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박환용 건축공간연구원 제7대 원장 취임식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박환용 제7대 원장의 취임식을 2월 24일(월)에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박환용 원장은 취임사에서 건축 도시 환경에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학제적 연구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구원의 핵심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수요자 친화적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환용 원장은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A&M대학교 도시및지역계획 석사, 미 코넬대학교 도시및지역계획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한국주택학회 명예회장,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포럼 위원장,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과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는 건축 학술 분야와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1월 23일(목)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건축과 도시환경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 두 기관은 ▲건축 학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지원 협력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정책·제도 개선 협력 ▲건축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 교류를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건축공간연구원-
숙명여자대학교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과 숙명여자대학교는 3월 13일(목)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실버 분야 미래 전문 인력 양성과 학연 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실버하우징 비즈니스 최고전문가 과정'을 연계 지원하며,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축공간연구원 박환용 원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도시·건축 환경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실버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간 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실버 주거 정책과 연구,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건축공간연구원-
청주시활성화재단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과 청주시활성화재단은 지역 활성화 및 도시재생 협력을 위하여 3월 24일(월) 청주시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두 기관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 지원 및 실행모델 협력 ▲청주시 도시재생·농촌·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컨설팅 지원 ▲토론회, 세미나 등 학술행사 공동 개최 ▲학술자료,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제공 및 발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업무협약 체결 이후 청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성화와 지역 활성화 정책 사업을 위한 사회혁신 실천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가 이어졌다. 세미나에서는 원세용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의 '청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용방안 -공동공간에서 공통공간으로-', 정인아 건축공간연구원 마을재생센터장의 '지역 활성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혁신실험 실행방안'까지 양 기관 전문가 2인의 발제가 진행되었다.

이어 이만형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6인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통 공간과 사회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
고려대학교 도시연구원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은 3월 27일(목) 고려대학교 도시연구원과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발굴 및 지원 협력 ▲도시공간 학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 교류 ▲학술행사 및 토론회·세미나 등 국내외 관련 행사의 개최 및 참여 ▲학술자료,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제공 및 발간 등을 서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도시 공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박환용 건축공간연구원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낼 양 기관의 성장과 성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각 기관이 보유한 연구 역량과 전문성을 결합하여 도시공간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2025 AURI 석·박사 과정
연구지원 프로그램 운영

건축공간연구원은 건축·도시 분야의 대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의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차세대 연구 인력 양성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2025 AURI 석·박사 과정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건축·도시·조경 관련 분야 석·박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4월 1일(화)부터 10월31일(금)까지 총 7개월 동안 운영되며,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13개의 연구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 수행, 논문 작성 등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연구지원 프로그램

공공건축, 스마트도시, 건축규제혁신, 한옥·건축문화자산, 경관, 마을재생, 농·어촌재생, 고령친화정책, 주거문화정책, 보행환경, 범죄예방환경, 녹색건축, 건축물관리지원

지원자는 연구주제, 연구목적 등 연구계획서 평가를 통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합격자는 희망하는 연구분야와 유사한 연구진과 매칭되어 멘토링을 받게 된다. 또한, 월 1~2회 온·오프라인 교류를 통해 연구수행을 지원받으며, 연구원 시설 이용 및 연구원 보유 데이터 제공, 논문 투고료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프로그램 종료 후 11월에는 공동논문, 학위논문, 위킹페이퍼 등을 바탕으로 한 성과 발표회가 예정되어 있다. 합격자 전원에게는 프로그램 수료증이 발급되며, 우수 활동자 1인에게는 건축공간연구원장상이 수여된다.